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21. 9. 9.(목)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서삼석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PROGRAM |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삼석 TV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시간	내용	비고
13:00~14:00	사전 리허설	사회 : **류정곤** KMI 명예연구위원
14:00~14: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14:10	• **개회사** **서삼석** 국회의원	
14:10~14:15	• **환영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직무대행	
14:15~14:25	• **축사**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4:25~14:30	국토 외곽지역 홍보 영상	
14:30~15:15	• 서해안 국토 외곽지역 현장의 목소리(**장정민** 옹진군수)	
	• 동해안 국토 외곽지역 현장의 목소리(**김병수** 울릉군수)	
	• 남해안 국토 외곽지역 현장의 목소리(**박우량** 신안군수)	
15:15~15:35	• **주제 발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방향** (**박상우** KMI 어촌어항연구실 실장)	
15:35~15:45	브레이크	
15:45~17:00	• **지정 토론**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윤미숙** 경상남도 섬어촌발전 자문위원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 본부장 **김희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좌장 : **신순호**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17:00~	폐회	



Contents

개회사 **서삼석**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환영사 **문성혁** 장관(해양수산부) ····· 3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한국해양수산개발원) ····· 5

축사 **정현찬** 위원장(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7

김사열 위원장(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9

임준택 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11

주제 발표 서해안 국토 외곽지역 현장의 목소리(**장정민** 옹진군수) ····· 13

동해안 국토 외곽지역 현장의 목소리(**김병수** 울릉군수) ····· 25

남해안 국토 외곽지역 현장의 목소리(**박우량** 신안군수) ····· 35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방향(**박상우** KMI 어촌어항연구실 실장) ···· 43

지정 토론 ····· 61

개회사



국회의원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 부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 좌장과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비롯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섬·어촌지역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리고 젊은 층의 유입 한계 등으로 지역소멸 현상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수면 어가 인구는 1990년 49만 6,089명에서 2019년 11만 3,898명으로 30년간 78.1%가 감소했습니다. 동 기간 60세 이상의 어가인구는 10.8%에서 54.7%로 급증하면서 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토 외곽지역은 어업활동 전진기지,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해양영토수호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큽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건 의료·교통·교육·행정서비스 등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경제성 논리에 막혀 생활기반 시설구축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섬·어촌의 주거환경 및 생활 서비스 개선, 수산업·어촌의 산업화를 비롯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사람과 지역 중심의 정부 정책 개편 등 국토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외곽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지혜와 고견을 모아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서삼석**

환영사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지난번 지방소멸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국토 외곽지역의 신 활력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간,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오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서삼석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소멸 위험도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섬 지역의 지역소멸지수가 0.234로 평가되어, 농촌(0.341)이나 도시지역(1.208)은 물론, 연안어촌(0.303)보다 지역소멸 위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섬 지역을 포함한 국토외곽지역은 생활공간이나 어업활동의 근거지일 뿐 아니라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자원 확보의 전진기지로서, 반드시 지키고 수호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귀어귀촌 지원,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통해 섬 지역 등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외곽에 위치한 어촌지역은 도시와 육지로의 인구유출, 수산업의 쇠퇴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도서지역 등 국토외곽지역에 사람이 모여들고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규 인력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어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겠습니다.

어촌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취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촌지역에 다양한 사업기회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와 해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국토외곽지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양수산부도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9.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환영사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불가피하게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되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물의 결실을 거두는 가을의 시작점에서 국회 서삼석 의원실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서삼석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함께 해 주신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준택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토 외곽지역에서 힘을 쏟고 계신 장정민 옹진군수님, 박우량 신안군수님, 김병수 울릉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접경지과 어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는 더 이상 우려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7년째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감소시대와 수축사회로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우리사회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균형도 육지

중심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토 외곽지역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이 고민되어야 하겠습니다. 국토 외곽지역은 '국토의 끝이 아니라 영토의 시작점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부처별로 칸막이를 넘어 맞춤형 정책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토 외곽지역은 우리나라 인구의 0.5%가 거주하고 있지만 국토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호활동에 대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익 가치는 연간 약 6,8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토 외곽지역에서 나타나는 접근성과 열악한 정주기반 등 사회·경제적 불리성을 신활력 전략방안 마련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서 발표, 토론된 결과는 차기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우리원은 「어촌 신활력 추진단」을 지난 8월에 출범하였고, 국토 외곽지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현장감 있는 문제를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9.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

축사



위원장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외곽지역의 섬·어촌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서삼석의원님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준택 회장님, 한국어촌어항공단 박경철 이사장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외곽지역인 섬과 어촌지역은 영토의 경계선으로서 영토수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과 도서지역은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촌과 도서지역의 소멸은 지역 공동체를 해체하고 해양영토 공백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 및 어촌지역 소멸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와 대응방안 모색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정책토론회는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농특위도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수산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어촌지역 소멸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미래의 어촌과 도서지역 활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서삼석 의원님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9.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축사



위원장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서삼석 의원님과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의원실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장정민 옹진군수님, 김병수 울릉군수님, 박우량 신안군수님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국토 외곽지역은 정주여건과 일자리 등 많은 부분이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은 오지 않고, 고령자 비율만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역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습니다.

워라벨, 힐링과 같이 일·가정 양립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은 쉼터로서 농산어촌을 재조명하게 합니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워크와 같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원격의료·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줍니다. 일터이자 삶터로서 농산어촌이 새로운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균형위는 지난 4월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농산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처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균형위를 통해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농산어촌유토피아 성공모델이 국토 외곽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토 외곽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아젠다와 정책과제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정책과제는 균형위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가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9.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축사



회장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안녕하십니까. 수협중앙회장 임준택입니다.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이번 정책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님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 외곽을 따라 해안선과 도서지역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서·어촌지역들은 국익신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바다에서 벌어지는 밀수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발견·신고 등 국토 최전방에서 국가 안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위급한 자연재해나 인적재해 발생 시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신속한 대응과 구제활동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귀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진 도서 어촌지역은 제한된 접근성과 열악한 의료·복지 그리고 낙후된 정주여건 등으로 점차 쇠퇴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국토 외곽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은 바로 어촌과 수산업 그리고 어업인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정부, 학계, 어업인이 함께 실질적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도서 및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토론회가 국토 외곽지역 어업인과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한층 고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임준택**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1

서해안 국토 외곽지역 현장의 목소리



옹진군수 **장정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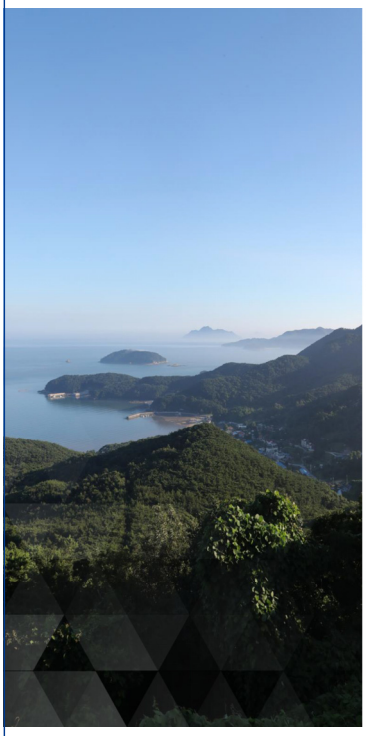
Ⅰ 전국 도서 현황 및 발전 저해 요인
Ⅱ 현안사항
- 국토 외곽지역 공통
- 옹진군 현안사항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

국토 외곽지역의 신 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옹진군





Ⅰ 전국 도서 현황 및 발전 저해 요인

전국 도서 현황 및 발전 저해 요인

전국 도서 현황

- 전국 도서는 2010년 말 기준 총 3,339개로 전국 58개 자치단체에 분포
  - 총 3,339개 도서 중 유인도는 13.9%, 무인도는 86.1%
- 도서인구는 전국 1.71% 수준이며,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
  - 향후 지속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서 공동화 우려
-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도로시설, 의료시설, 교육 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이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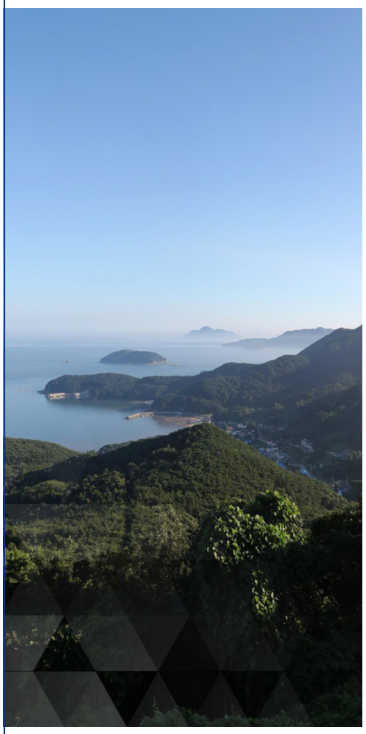
전국 도서 현황 및 발전 저해 요인

도서지역의 내재적 발전 저해 요인

1. 취약한 산업경제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정주여건 열악
2. 산업기반과 정주환경 악화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초래
3. 산업의 영세성과 생산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서경제 활성화 역부족
4. 육지로부터 격리된 고립성과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각종 운항 제약 여건으로 도서 접근성 매우 불리

도서지역의 외재적 발전 저해 요인

1. 중요한 국토의 일부로써 도서가 존재하나 인구가 작고 육지에서 떨어진 도서라는 이유로 도서개발과 관리에 관심 저조
2.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 투자로 개발 소외
3. 국토공간상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속 관리해야하나 낙후지역개발 차원으로 접근



Ⅱ 현안사항

• 국토 외곽지역 공통

1. 여객선 대중교통화 도입
2. 도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
3. 국토 외각도서 면세지역 지정
4. 국토 외곽도서 해양치유지구 지정
5. 어촌 선진화를 위한 어촌뉴딜300사업 지속 추진
6. 도서지역 스마트양식 구축 지원

• 옹진군 현안사항

7. 도서지역 통신망 품질개선
8.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9.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확대 필요

국토 외곽지역 공통

1. 여객선 대중교통화 도입

- **건의배경**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됨에 따라 육상교통 수준의 지원을 통한 연안여객선 교통여건 개선 필요
- **문 제 점**
  - » 여객선이 법적으로 대중교통화 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지원 미비
    - ※ 육상교통 대비 SOC지원 24%, 여객운임 최대 4.2배
  - » 열악한 국내 선사 재정여건으로 여객선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 불편** 및 **안전사고 내재**
- **건의사항**
  - » 연안여객선의 실질적인 대중교통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여객선 운임보조 강화 및 전면 (준)공영제 실시
    - 연안여객선 현대화, 여객선 접안시설 및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지원 강화



국토 외곽지역 공통

2. 도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

- **건의배경**
  - » 엄격한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완화 및 非 객관적인 시정 정보(목시관측)에 의존하는 **출항 통제 개선**으로 **도서주민 해상교통 불편 해소**
    - ※ (인천~백령항로 여객선 통제 일수) 2020년 총 88일, 월 평균 7.3일(풍랑 73, 안개 15)
- **문 제 점**
  - »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통제** 및 출항통제 기준의 **보수적 적용**으로 **도서주민 이동권 제약과 불편 초래**
  - » **선박 항해장비의 급격한 발전**에도 선박 통제기준 수립 후 **수십 년간 개선 사항 전무**, 실제 운항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지적 해무로 결항 사례 빈번**
- **건의사항**
  - » 해무에 따른 여객선 출항통제 기준완화**(현행, 시정 1.0km → 개선, 시정 0.5km)**
  - » **해상의 기상 측정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부의 및 안개 관측장비(시정계) 도입**
  - » 여객선 내항성능 평가를 통한 **선박별 출항정지 기준 객관화 및 차등 적용**



국토 외곽지역 공통

3. 국토 외곽도서 면세지역 지정

- **건의배경**
  - »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국토 외곽도서를 면세지역으로 지정
- **주요내용**
  - »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국토 외곽 도서를 내국인 면세지역으로 지정
    -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향상
- **문 제 점**
  - » 국토 외곽도서 내국인 면세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부재
    - ※국내 유일 내국인 면세지역을 운영하는 제주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운영
- **건의사항**
  - » 국토 외곽도서 내국인 **면세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건의**
    - 특별법 개정 발의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한 법률 제 · 개정 으로 면세지역 지정



JDC 공항 면세점

국토 외곽지역 공통

4. 국토 외곽도서 해양치유지구 지정

- **건의배경**
  - »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바다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 **주요내용**
  - » (해양치유공간 조성) 시범거점 조성, 공간 확산
  - »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국내외 치유 네트워크 구축, 해양치유 수요확대
  - » (산업 기반 조기 마련) 전문 인력 양성, 자원 관리 체계 마련
- **쟁점사항**
  - » 2021. 2.19.「해양치유법」시행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필요
  - » 해양치유지구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기존 시범 지자체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만 우선 지정 계획**
- **건의사항**
  - » 고품질의 해양자원이 풍부한 **국토 외곽도서에 해양치유지구 우선 지정 건의**



국토 외곽지역 공통

5. 어촌 선진화를 위한 어촌뉴딜300사업 지속 추진

- **건의배경**
  - » 어촌 고령화율 증대 및 인구 저하, 소득 감소가 지속되어 어촌 소멸 위기
    ※어촌인구('17년 114만명⇒'20년 9.8만명), 어촌고령화('15년 30.5%⇒'20년 36.2%)
  - » 낙후된 어항시설로 인하여 해난 및 인명사고 위험 상존
  - » 활력넘치는 어촌 조성을 위한 접근성 개선 및 어촌 현대화 지속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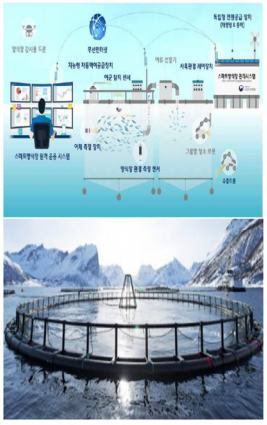


- **문 제 점**
  - » 어촌뉴딜사업은 2022년까지 사업대상지 300개소 선정 후 종료될 계획이나, 이는 사업 후보대상지 중 12.6%에 불과한 수준으로 쇠퇴하는 어촌 · 어항의 현대화 및 어촌 주민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하여 **어촌뉴딜사업 지속 추진 필요**
- **건의사항**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내여행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해양관광을 육성**하고, **활력 넘치고 찾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어촌뉴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요청**

국토 외곽지역 공통

6. 도서지역 스마트양식 구축 지원

- **건의배경**
  - » 고비용 저효율의 양식산업 구조 개선 필요
  - »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첨단 원격 시스템을 적용한 효율성 증대 도모
- **주요시설**
  - » 어류의 먹이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육환경에 따라 적정사료 공급
  - » 수중영상을 통한 어류의 크기와 무게 추정 및 용존산소 자동 공급 · 조절
- **문 제 점**
  - » 국토 외곽 도서지역의 점진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자동화 시스템 도입 필요
  - » 고령화로 인한 스마트양식 시스템을 관리 ·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필요
- **건의사항**
  -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어업재해 및 환경적인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 **수산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토 외곽도서의 스마트양식 구축 지원 건의**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사업(예시)

옹진군 현안사항

7. 도서지역 통신망 품질 개선

- **건의배경**
  - » 서해5도의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망은 해무 등 기상악화 시 통신망 두절로 의료, 교육 등 피해 초래
  - » 도서지역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터넷속도 저하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제기와 인터넷용량 증설 요청 폭증
  - » 해저광케이블 구축으로 차별 받지 않는 5G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 **(사업위치)** 서해5도(백령면, 연평면)
  - »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
  - » **(사 업 비)** 약660억원(국비100%) 추정
  - » **(사업규모)** 육지 – 해상(분기점) – 백령도(207km)
    연평도(분기-연평 62km)
  - » **(사업내용)** 무선방식[마이크로웨이브(M/W)]을 해저광케이블로 대체



옹진군 현안사항

7. 도서지역 통신망 품질 개선

- **그간 추진사항**
  - » (2016. 4 ~9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 용역(구축 필요)
  - » (2020. 7월) 제10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 개최(중장기 검토사업)

- **문 제 점**
  - » 마이크로웨이브(M/W)는 장거리용으로 개발된 통신망이나, 최적 50km로(백령도 196km) 기상 악화 시 대역폭 축소로 통신지연 및 장애 발생
  - » 마이크로웨이브(M/W) 용량 한계로 쾌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불가
  - » 무선전파 북한지역 월경으로 군(軍) 통신보안 취약

- **건의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 · 장기 검토 중인 마이크로웨이브(M/W) 주파수 추가 공급보다는, **기상 및 데이터 용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해저광케이블 구축**을 중앙정부 차원 적극 추진 건의

옹진군 현안사항

8.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 **건의배경**
  - » 서해5도 해역은 접경수역으로 협소한 어장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조업 환경 열악
  - » 남북 긴장에 따른 조업여건 악화, 야간조업 금지 등 불리한 조건속에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어업환경 개선



- **어장현황**
  - » **(서해5도 어선수)** 228척(연평 67, 백령 93, 대청 68)
  - » **(어장면적)**

계	A어장	B어장	C어장	D어장	백령, 대청 주변어장	연평도어장
1,854.55㎢	57㎢	232㎢	138㎢	154.55㎢	368㎢	905㎢

옹진군 현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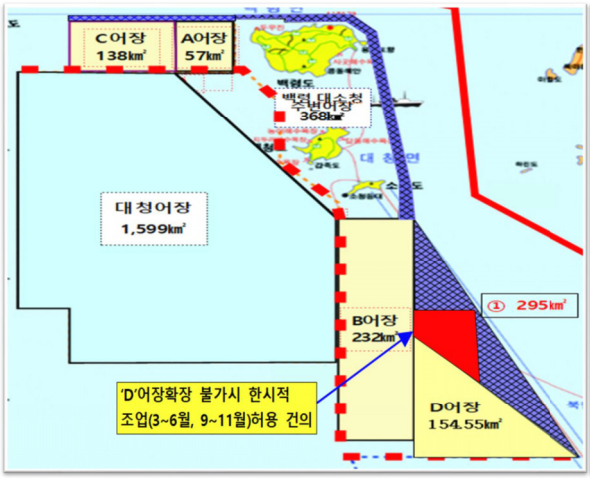
8.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 **문 제 점**
  - » 서해5도 어장은 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잦은 조업 통제 및 기상 악화 등으로 어로활동 제한
  - »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 시(19년3월), 백령해역 어장확장 제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 야간조업 1시간 연장(일출 前 30분, 일몰 後 30분)은 조업여건 개선에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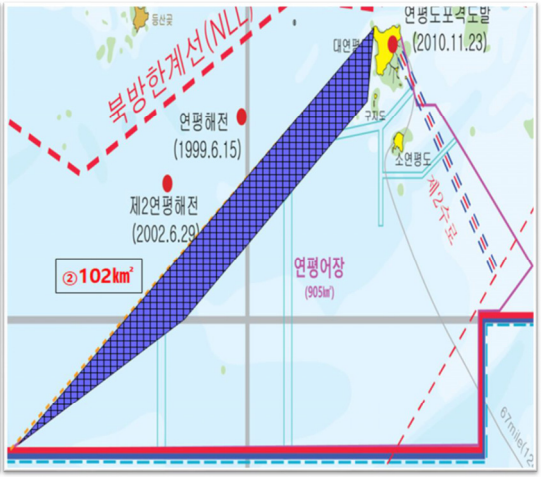
- **건의사항**
  - » **(어장확장)**
    - 백령북방 및 대소청 주변어장 : 295㎢ 확장
    - 연평어장(서북방) : 102㎢ 추가 확장
    - D어장 : 174㎢ 추가 확장
  - » **(조업시간 연장)**
    - 일출 前 1시간 ~ 일몰 後 3시간
    - 또는 야간조업 전면 허용

옹진군 현안사항

8.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백령 • 대청 295㎢ 확장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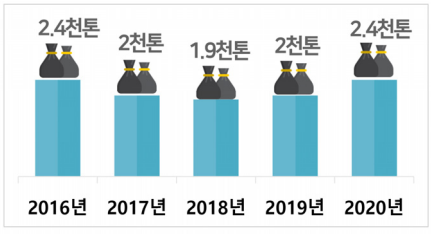


연평서방 102㎢ 확장 건의

옹진군 현안사항

9.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확대 필요

- **건의배경**
  - » 서해안 바다쓰레기는 한강하구 및 중국발 유입, 낚시어선 및 어선어구 등에서 발생하고 태풍 시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 중국 어선 등에서 버리는 어업쓰레기가 연안(해안가)으로 밀려와 해양환경을 오염, 해양생태계를 위협
  - » 밧줄, 어망 등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하는 등 여객선, 어선 등 선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옹진군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현황**





옹진군 현안사항

9.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확대 필요

- **문 제 점**
  - » 옹진군은 113개(유인도 23, 무인도 90)의 섬으로 광활한 서해바다 해상에 소규모의 해안가로 이루어져 있어 일자리 위주의 쓰레기 수거로는 역부족임
  - » 무인 도서는 장비 접근이 어렵고 인력 투입 또한 위험성이 높음
  - » 바다 해상에 떠다니는 부유물 쓰레기는 수거 불가 상황임

- **건의사항**
  - »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원활한 수거를 위해 옹진군에서 직접 운항할 수 있는 200톤급 해양환경전담 정화선 추가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중앙부처의 적극 지원 건의



차도선 조감도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2

동해안 국토 외곽지역 현장의 목소리



울릉군수 **김병수**

꿈이 있는 친환경 섬 건설



국토 외곽지역의 신 활력 전략마련 정책발표

울릉군
ULLEUNG-GUN

1

목 차
contents






01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추진방안

02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사업 개선

03 공모사업 및 균특사업 선정기준 개선

2

아름다운 신비의 섬
울릉군

제1-1장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관련 현황

1.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관련 현황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동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3. 울릉군 여객선 현황
4. 울릉군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한 추진경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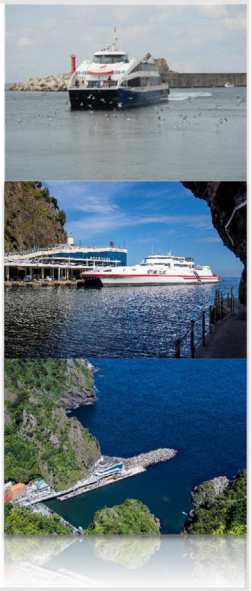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

1-1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추진방안

01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관련 현황

- 연안여객선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
-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 주민들에 비해 비싼 교통비용을 부담하며,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된 실정
- 섬 지역 특성상 연안여객선이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 수행
- 도서민을 위한 공공성 측면을 고려,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 확대 필요

2020. 3.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는 근거 마련



4

1-1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추진방안

02 대중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 대중교통수단에 여객선 추가
- 대중교통시설에 여객터미널선착장 등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공작물 추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상대중교통 부분에 관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 대중교통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은 아직까지 육상교통에 비해 열악

국내 연안해상교통	국내 육상대중교통
1. 타 교통수단 대비 높은 운임	1. 일반인 운임지원 -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임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등 특정 연령대 추가지원 시행
2. 낮은 서비스 질 - 선사 수 증가, 여객선 수 감소, 항로의 운항 빈도 감소	2. 준공영제 시행 -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낮은 대중교통 수준의 낮은 운임을 유지하고, 선사적자 보존
3. 차도선 시장 확대로 선박 고급화에 역행 - 여객선 선령은 낮아지는 추세이나 여객선 운송시장에 비해 차도선 시장이 확대	3. 교통수단간 환승할인 -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 시 요금할인 가능
4. 안전시설 열악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부재	4. 교통수단간 연계 등 체계적인 노선 구축 - 버스, 지하철, 철도 등 통합적으로 관리 및 계획의 수립을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가 잘 되어 있고 노선이 효율화 되어 있음

5

1-1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추진방안

※ 2,400톤급의 썬플라워호의 선령만료(2020. 2)로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600톤급의 소형선박 대체투입, 연간 130일 정도 결항이 발생하여 이용객 불편증가 및 관광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03 울릉군 여객선 현황

선 명	총 톤 수(톤)	전 장(m)	여 객 정 원(명)	항 해 속 력(노트)	운 항 항 로	소 요 시 간(편도)	거 리	종 류
엘도라도호	668	52.0	414	34	포항⇔울릉(도동)	4시간 00분	포항217km (117마일)	정기
웨스트그린호	297	36.29	344	28	울릉(저동)⇔독도	1시간 50분	독도87.4km (48마일)	부정기
썬라이즈호	388	42.16	442	38	울릉(저동)⇔포항	3시간 10분	포항217km (117마일)	정기
씨스타1호	388	37.98	443	40	묵호⇔울릉(사동) 울릉(사동)⇔독도	2시간 40분 1시간 35분	묵호157km (85마일)	정기
씨스타3호	550	43.13	587	35	묵호⇔울릉(도동) 울릉(도동)⇔독도	2시간 50분 1시간 35분	묵호161km (87마일)	정기
씨스타5호	388	37.98	438	35	강릉⇔울릉(저동) 울릉(저동)⇔독도	3시간 1시간 35분	강릉178km (96마일)	정기
씨스타11호	420	45.69	449	35	강릉⇔울릉(저동) 울릉(저동)⇔독도	3시간 1시간 35분	강릉178km (96마일)	정기
씨플라워호	388	42.20	443	38	후포⇔울릉(사동) 울릉(사동)⇔독도	2시간 20분 1시간 10분	후포159km (86마일)	정기
우리누리1호	534	39.75	448	36	울릉(저동)⇔포항 울릉(사동)⇔포항	3시간 30분	포항219km (118마일)	정기

6

1-1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추진방안

04 울릉군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한 추진경과

- '18. 10. 08. : 울릉군 주민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조례 공포
  - 연간 10억 원 한도, 최대 10년간 주민수송비용(1인당 약 26,000원) 지원
- '19. 03. 05. :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 지원조례 근거로 대형여객선 유치 불가 판단, 원점에서 재추진을 위함
- '19. 04. 22. : 1차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지원 건의(울릉군→경북도)
  - 울릉군 조례 기준 재정지원 불가, 적정원가 분석 후 손실부분 지원 협의
- '19. 07. 24. : 2차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지원 건의(울릉군→경북도)
  - 운항수지 분석자료 토대, 경북도 재정지원 방침 결정 및 관련 조례 제정 건의
- '19. 09. 06. :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 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 ㈜씨스포빌, ㈜대저건설, ㈜울릉독도해운 3사 참여
- '19. 12. 27. :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 경상북도-울릉군-선사 3자 공동협약(도의회의장, 남진복 도의원, 정성환 의장 배석)
- '20. 03. 26. : 1차 실시협약 체결 추진→보류
  - 도의원・비대위, 도지사에 반대입장 건의로 보류(여객전용선→화물겸용선)
- '20. 06. 22: 2차 실시협약 체결 추진→보류
  - 도의원, 도지사에 협약체결 불가 입장 전달(주민 미합의)
- '21. 01. 04. : 포항청, 여객운송사업자(대형카페리선) 선정 공모 추진
- '21. 05. 14. :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공포(당초 지원조례 폐지)
- '21. 06. 09. :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사업 실시협약체결
  - 울릉군-선사 협약(군의장, 5대기관단체장, 노인・여성・아동・여객・관광협회장 참석)
- '21. 07. 01. : 포항청, 대형 카페리 여객선 도입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선정(㈜울릉크루즈)

7

아름다운 신비의 섬 울릉군

제1-2장 연안여객선 운송체계 개선방안

1.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2.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
3. 해상교통 사각지대 해소
4. 해상, 육상 통합 예·발매 추진
5. 정부지원체계 법적 근거 마련

8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

1-2 연안여객선 운송체계 개선방안

01 연안여객선 대중교통체계 구축



연안여객선 현대화

- 현대화펀드 규모 확대
- 친환경 연안여객선 건조지원
- 이차보전사업 개편

연안여객선 여객운송시설 현대화

- 접안시설 확충
- 편의시설 확충

해상·육상 교통 연계 강화

- 연안여객선터미널과 주요 버스터미널·KTX 연계 노선계획 수립하여 주요 교통망 직행노선 개설
- 여객선 + 셔틀 패키지 관광 상품 개발

9

1-2 연안여객선 운송체계 개선방안

02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 방안

운임조정체계 합리화

- 연안여객선 원가 및 수입의 투명화를 전제로 요금산정기준 마련
- 선종별, 서비스 거리별 요금 차등화

운임지원체계 개선

- 초기 지역민에서 점차 모든 국민으로 지원대상 확대



03 해상교통 사각지대 해소

적자항로의 공영화

- 지자체 직접운영 공영제 추진

비수기 수요응답형 여객선 보조

-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시 도서지역 비수기 수요응답형 연안여객선 도입계획 반영

10

1-2 연안여객선 운송체계 개선방안

04 해상·육상 통합 예·발매 추진

- 통합 예·발매 시스템 구축
- 통합 승선권 및 마일리지 도입

05 정부지원체계 법적 근거 마련

- 해운법 제44조

  도서지역 1일 생활권화를 위한 신규 노선 개설 및 운항횟수 증대,

  동절기 및 비수기의 정기노선 유지 등에 대한 운항손실 보조를 위한 내용 추가

- 해운법 시행규칙

  일반인 운임지원 관련 규정, 도서지역 1일 생활권화를 위한 신규 노선 개선 및 운항횟수 증대,

  동절기 및 비수기의 정기노선 유지 등에 대한 운항손실 보조를 위한 내용 신설



➡ 특히 **울릉도의 경우 연간 130일 정도 여객선 결항이 발생**,
우리나라 모든 도서지역 중에서 육지와의 단절성이 가장 높아 해당항로 여객선의 경우 공공성이 더욱 크며,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술적 결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박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운항 결손에 대한 보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11

아름다운 신비의 섬
울 릉 군

제2장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사업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12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

2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사업 개선

01 현황 및 문제점

- 국토 외곽 도서지역의 경우 대부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울릉군의 경우 **유일한 의료기관인 울릉군보건의료원의 모든 의료진은 공중보건의에 의존**
- **'21년 공중보건의 배치 시 필수 진료과목인 내과, 정형외과, 외과, 산부인과 미배치**
- 특히 분만취약지역인 울릉군은 **임신부의 진료 공백으로 위험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근 타시군 진료이동 시 해상교통(편도4시간)을 이용하여 평균 2박3일이 소요 의료접근성이 매우 열악함
- 울릉군내 **의료인력 부재로 의료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이 매우 낮은 도서지역의 **의료자원 불균형으로 필수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02 개선방안

- 전문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보건사업 업무대행 사업비 국비 지원
- 국토 외곽 도서지역 의료지원 사업 확대 시행

※응급환자 육지 이송현황

(단위: 회수/명)

연도별	합계	헬기	함대	여객선	기타	비고
2018	164/185	47/51	13/16	103/117	1/1	독도평화호1
2019	106/116	44/48	16/17	42/46	4/5	독도평화호1 미래호1 무궁화호1
2020	102/111	54/57	21/24	25/28	2/2	미래호2
2021	53/56	33/34	7/8	13/14	-	6/30 기준

13

아름다운 신비의 섬
울 릉 군

제3장 공모사업 및 균특사업 선정기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14

꿈이 있는 천환경섬 건설

3 공모사업 및 균특사업 선정기준 개선

01 현황 및 문제점

- 중앙부처 대부분의 공모사업, 균특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이행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불가
- '22년 예산 반영 사업 기준, '19년 12월말까지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에 따라 사업 우선 선정
- **대부분 공모사업, 균특사업의 부지매입비 지자체에서 100% 부담**
  - '21년 울릉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현황 : 16.93% (경북 내 1위)
  - 신청된 사업계획 평가기준이 입지선정을 우선조건으로 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개발이나 공공용지가 부족해 사업신청 자체가 불가**

02 개선방안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균특사업의 심사기준 조정**
  - 국토외곽지역의 경우 부지확보 심사기준 조정, 사업비에 부지매입비 포함 등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무상 대부 사용 기준 완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외곽지역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 · 어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

15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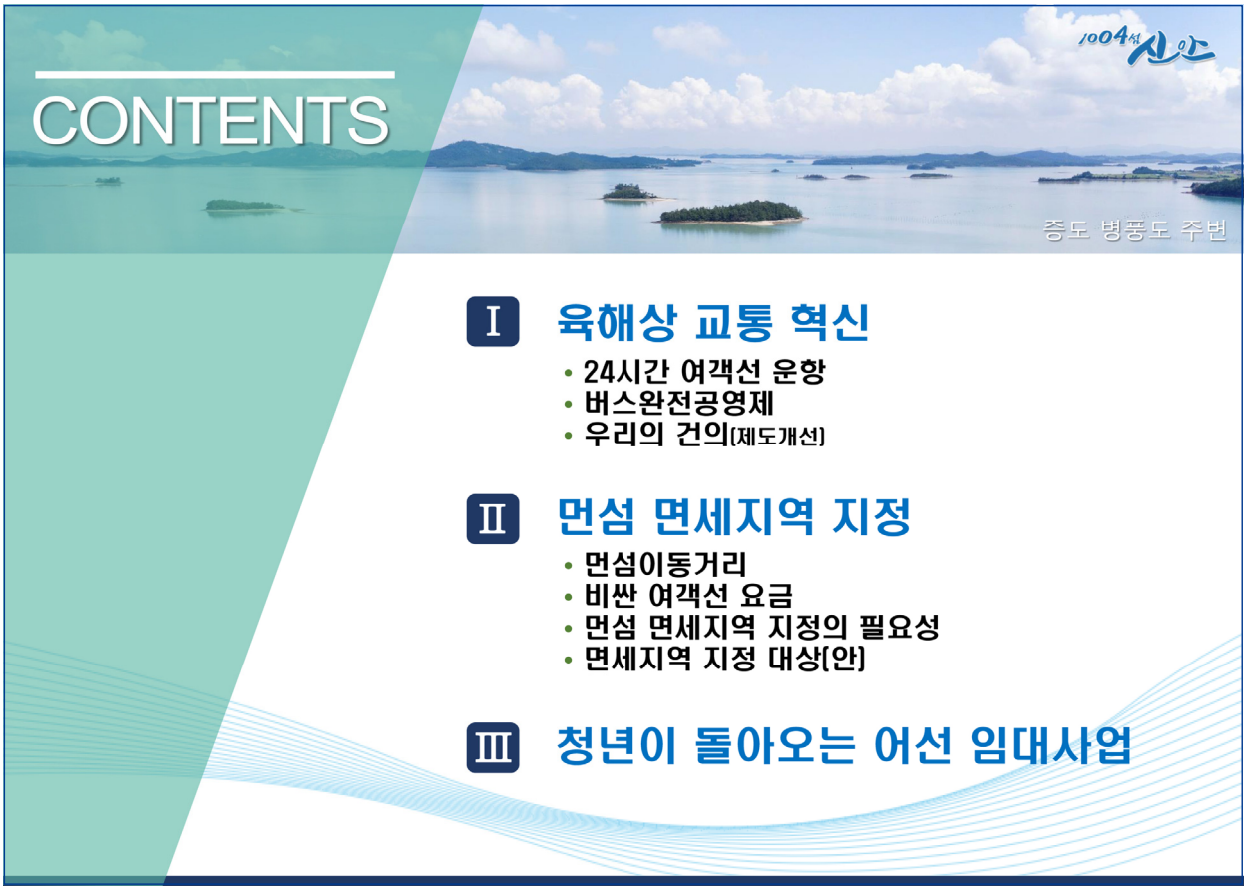
발표 3

남해안 국토 외곽지역 현장의 목소리



신안군수 **박우량**


1004섬 신안
국토 외곽 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 정책 발표
1004 신안군
자은 두봉산 전경


1004섬 신안
CONTENTS
증도 병풍도 주변
Ⅰ 육해상 교통 혁신
• 24시간 여객선 운항
• 버스완전공영제
• 우리의 건의(제도개선)
Ⅱ 먼섬 면세지역 지정
• 먼섬이동거리
• 비싼 여객선 요금
• 먼섬 면세지역 지정의 필요성
• 면세지역 지정 대상(안)
Ⅲ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

Ⅰ 육·해상 교통혁신

1004섬 신안

24시간 여객선 운항



2007년 전국 최초 실시

- 일출 전·일몰 후 30분까지 운항 규제 해제
- 섬에서 23시에도 육지 이동 가능(비금 가산)

3개 항로 운항 **연간 이용객** 67천명, 67억원

1년 적자보존액 11억

도선 · 여객선 공영제 함께 실시

- **도선공영제**(작은섬 23개 항로, 25개 섬)
- **총24척**
  행정선 13척, 도선 6척, 종선 2척, 임차선 3척
- **이용객 : 82천명**

Ⅰ 육·해상 교통혁신 정책

1004섬 신안

버스 완전공영제



2007년 전국 최초 실시

- 정선군, 화성시 시행
- 14개 회사 5년에 걸쳐 군일괄 매입
- 65세 이상 및 학생·국가유공자 장애인 무료
  (전체 이용객의 83% 무상제공, 년간 67만명 이용)

22대 33노선 ▶ 67대 117노선 확대

- 연간 19만명 ▶ 연간 67만명

1004버스 병행운영

- 공영버스 미운행 지역버스 종료~새벽시간 예약운행

1대당 운송원가

- 민간버스 1억 2천만원 / 7천 5백만원

Ⅰ 육·해상 교통혁신

1004섬 신안

우리의 건의(제도개선)

육·해상 교통 개선 ▶ 삶의 질 (소득, 복지, 인구) 개선

1. 여객선 완전공영제 시범 운영

- 자치단체와 정부 간 매칭펀드 : 공영제 촉진
- 자치단체 중심 공영제(100% 가능)

2. 작은섬 도선 공영제

- 자치단체 중심 공영제
- 국가에서 100% 지원

3.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자치단체 우선 지원

- 버스공영제 시행 자치단체 국비 지원
- 초기 시행시 상한선 설정 지원

Ⅱ 먼섬 면세지역 지정

1004섬 신안

먼섬 이동거리





Ⅱ 먼섬 면세지역 지정

1004섬 신안

비싼 여객선 요금



KTX요금 [서울 - 목포]

53,100원[2시간 23분]

여객선 요금 [목포 출발]

홍 도	42,000원[2시간 30분]
흑산도	34,300원[2시간]
가거도	61,300원[3시간 10분~4시간]



Ⅱ 먼섬 면세지역 지정

1004섬 신안

먼섬 면세지역 지정의 필요성

독일의 경우

- 헬골란트(육지 64km)
- 면세지역 지정 ▶ 방문 부담 최소화, 개발 촉진

- 섬 지역 **관광**을 위한 **여객선 요금 고가**
  - 흑산 왕복 6만 8천원, 백령도 왕복 13만 3천원, 울릉도 왕복 12만 2천원
-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인책 필요
- **여객선 공영제 전면시행 곤란** -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신안군 장도 전경

Ⅱ 먼섬 면세지역 지정

1004섬 신안

면세지역 지정 대상(안)

1. 조건

- 육지에서 50km 이상 이격된 면소재지 이상의 섬
  - 신안군 흑산도, 옹진군 백령도, 울릉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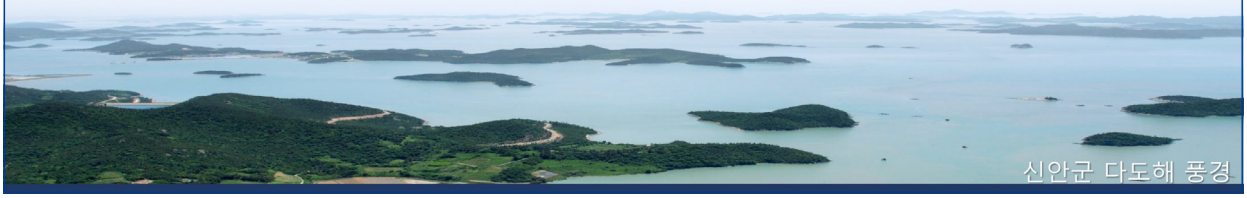
2. 제도 적용

- 면세지역 지정 곤란시 우선 한정 면세지역 지정
  - 제주도 제도 우선 적용

3. 수익금 배분

- 면세 지역 수익금 50% ▶전국 섬발전 기금화

※ 2013. 6월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 1차 용역 실시



신안군 다도해 풍경

Ⅲ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 사업

1004섬 신안

어선임대 사업

- 어선, 어구 구입 ➡ 어업인에게 연간 0.3%의 임대료 부과

조례 제정 : '19. 7. 5.

- 신안군 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사단법인 신안군 어선업육성협회 설립 : '19.10.1. 위탁운영

- 어선 및 어구 구입비 전액 지원(11척)
  - 천사 1호, 천사2호 임대(2척) : '19. 12.
  - 천사 3호 ~ 8호 임대(6척) : '20. 6.
  - 천사 9호 ~ 11호(3척) 추진中 : '21. 8.

사업비 : 32억원(군비100%)

- '21년 우수 수산정책 선정(해수부)
- 한국수산지원 공단 "어선임대사업 도입방안 연구" 용역실시 ('21.2)
- 정부시책사업으로 전면 추진 건의(국비 100%)
- 신안군 천사 100척 까지 목표(2030년)





신안군 홍도 전경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방향



KMI 어촌어항연구실 실장 **박상우**

국회 정책토론회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방향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박상우 어촌어항연구실장
swpark@kmi.re.kr

CONTENTS

1. 국토 외곽지역의 의미와 가치
2. 국토 외곽지역의 진단과 전망
3. 해외동향과 시사점
4. 신활력 전략과 과제
5. 결론 및 제언



01 국토 외곽지역의 의미와 가치

대한민국 국토 외곽지역은...













01 국토 외곽지역의 의미와 가치

국토 외곽지역

국토 외곽지역

"영토 시작점"

"국토 끝"



접경지역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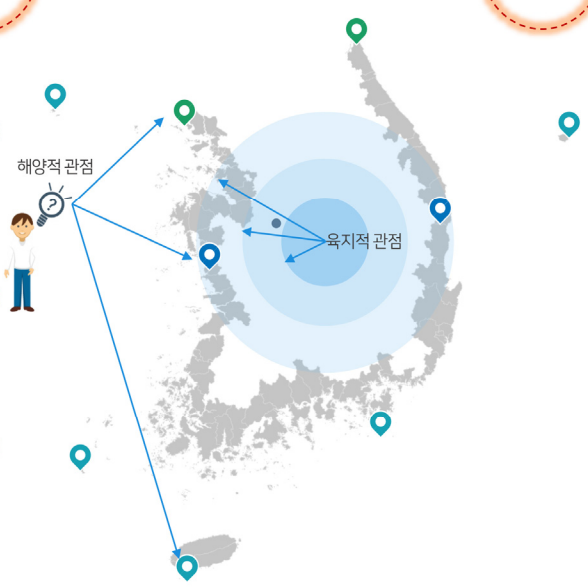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53년) : 해상의 북방한계선 시군
- 옹진군·강화군(인천광역시), 고성군(강원도)
- 옹진군(5개 섬) : 백령 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섬 발전 촉진법

-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 제주 본섬 제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바다에 인접하여 수산업을 주로 생활하는 지역
- 읍면의 전지역
- 동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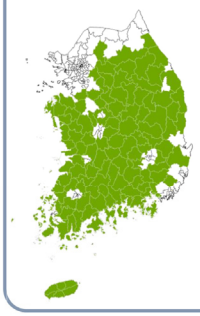
01 국토 외곽지역의 의미와 가치

국토 공간체계

대한민국에는 국토 외곽지역 존재

해양적 사고로 전환하면 국토 외곽지역이 보입니다.

일반농산어촌지역
-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군구



도시활력증진지역
- 도농복합 인구 50만 명 이상
- 100개 시군구



성장촉진지역
-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 고려
- 70개 시군구



특수상황지역
- 특수상황지역 34개 시군구
- 섬지역 19개 시군구



01 국토 외곽지역의 의미와 가치

국토 외곽지역의 공익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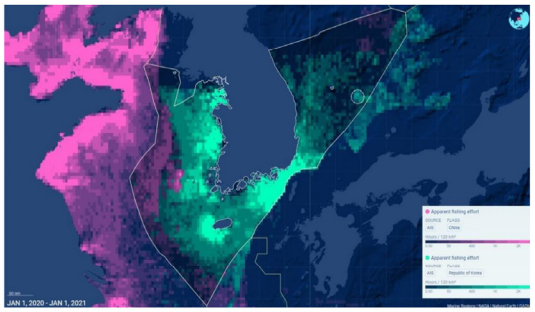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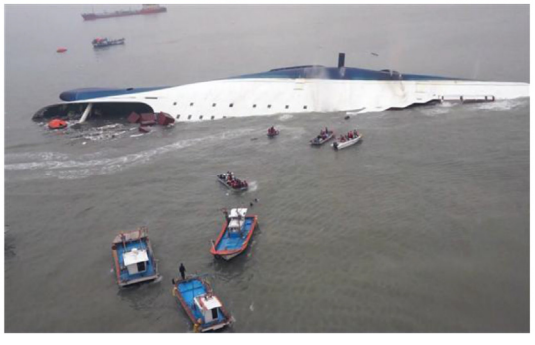
국토 외곽지역 공익기능

- 생활정주기반
- 어업활동 전진기지
- 국민생명 및 재산보호
- 국민 해양레저 지원
- 해양영토 수호









01 국토 외곽지역의 의미와 가치

왜 국토 외곽지역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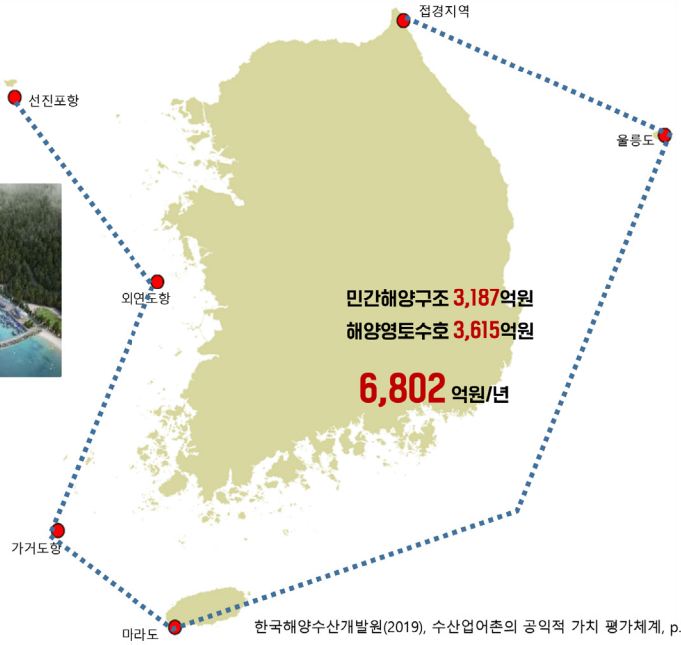
① 치열한 해영영토 수호와 강화 대비
(중국, 북한, 일본)

② 통일시대 대비 수산협력 교두보 역할
(서해접경 : 선진포항, 동해접경 : 명파항)



③ 해상 재난구호활동의 거점기지 강화

④ 지역소멸 대비 해양형 국토균형발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p.125

02 국토 외곽지역의 진단과 전망

국토 외곽지역 무엇이 다른가 ?



인포그래픽 전체인구의 0.5%(2018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국토의 4.4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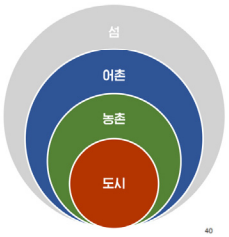
인포그래픽 지역소멸(무인화) 위기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시급

인포그래픽 농·수산업(1차산업) 중심의 생활·경제권 접근 필요

인포그래픽 이격성·환해성으로 차별화된 생활서비스 기준 적용 필요

02 국토 외곽지역의 진단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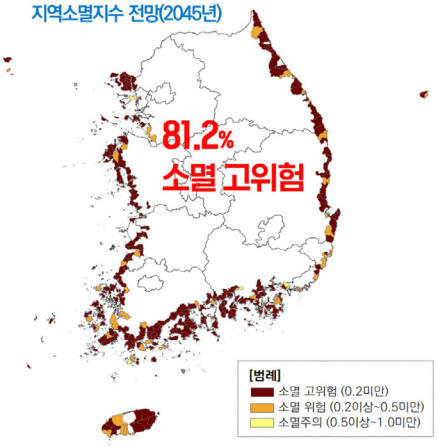
지역소멸(무인화)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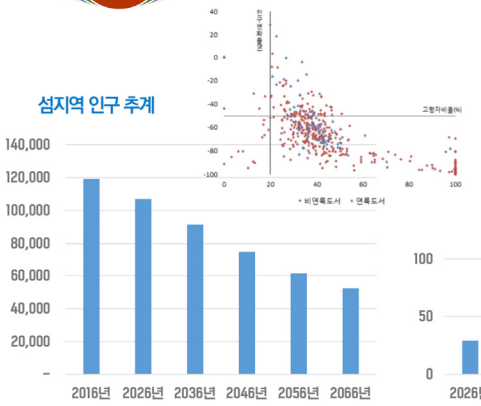
<입지유형별 지역소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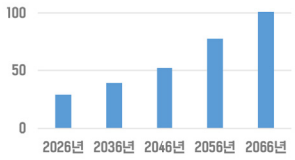
지역소멸지수 전망(2045년)



섬지역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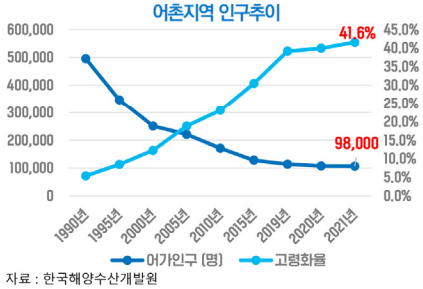


무인화 섬 추계 전망



자료 : 지방행정연구원

어촌지역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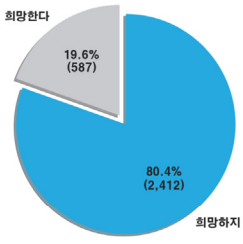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2 국토 외곽지역의 진단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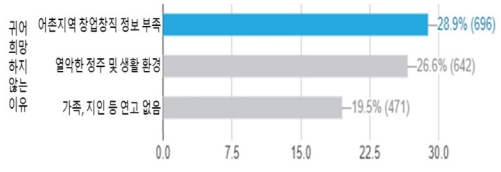
Human Migration(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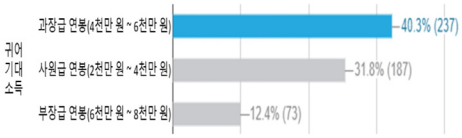
도시청년 귀어 희망 **19.6%**, 귀어포기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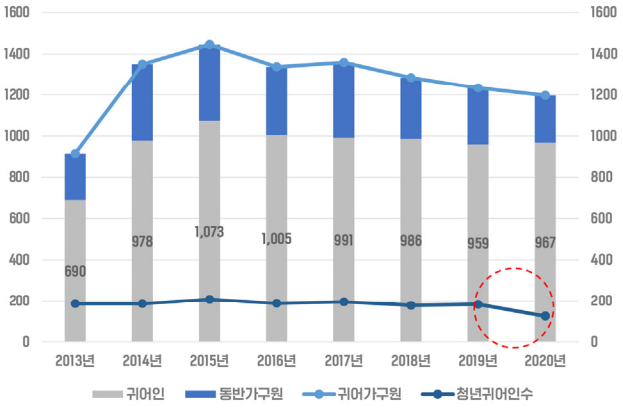
〈도시청년 귀어 수요 조사〉

대상 : 광역도시 청년(39세 이하)
응답자수 : 3,000명
표본오차 : ±1.79%(95% 신뢰수준)





귀어통계 추이(2013~2019년)



자료 : 통계청, 귀어귀촌통계

제약요인



02 국토 외곽지역의 진단과 전망

낮은 삶의 질 여건

"물류비가 포함되어 식료품, 어업자재 유류비 등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 리어카에 이동해 사선에 실어 육지로 간 적이 있어요"

"평생교육, 도서관, 체육관, 문화회관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전무 합니다"

"섬 내 이동이 불편해 LPG가스통이나 택배 서비스가 불가능해요"

"식료품 구입, 약국 ,목욕탕, 이미용 등을 섬 밖으로 나가서 해결해요"

<입지유형별 삶의 질 만족도>



자료 : 해양수산부



구분	일반지역 (a)	도서지역 (b)	차이 (b-a)
택배비	2,500	7,700	5,200
연간 택배 이용횟수	65		-
연간 택배비	162,500	500,500	338,000





자료 : 해양수산부

02 국토 외곽지역의 진단과 전망

열악한 접근성

95개 섬(6,666명) 해상교통 사각지대(24.7%)...삶의 질 취약

"정기적인 차도선이 없어서 이웃주민 어선을 부탁해서 이동해요"

"잦은 결항으로 경제적인 비용부담이 크고 생활에 불편이 커요"

"섬내 대중교통이 없어서 아픈 아내를 집에서 항까지 리어카를 이용해요"



교통수단	단위 여객운임 (원/km)* (a)	거리** (km) (b)	연간 평균 이용빈도† (회) (c)	연간 총 여객운임 (원) (a × b × c)
선박	362.9	25	35	317,538
항공	209.6	25	35	183,400
KTX	164.4	25	35	143,850
전철(수도권)	125.0	25	35	109,375
시외버스	116.1	25	35	101,500
고속버스	62.4	25	35	54,600

* 참조 : 김시곤(2018)「국가교통망의 위상정립과 연안해상교통체계 정상화방안」, 저자 가공

** 전국 유인도서에서 기점항 간 평균거리 약 25㎞ 적용, (참조1-2)

† 도서주민 여객선 이용 빈도 = 총 도서민 여객선 이용 실적(명) / 총 도서민 수(명), (참조1-3,4)

02 국토 외곽지역의 진단과 전망

현장의 목소리 (환경분야)

쓰레기 발생

생활기인 쓰레기
어업활동 기인 쓰레기
관광활동 기인 쓰레기

전남 섬지역 87천 톤(추정)
해조류 양식장 피해규모 2.8억 원

쓰레기 적기 반출 한계
(예산 및 인력 • 장비 부족)

미관, 환경문제 발생
(경관 저해, 악취, 해충 등)

생활기인 쓰레기 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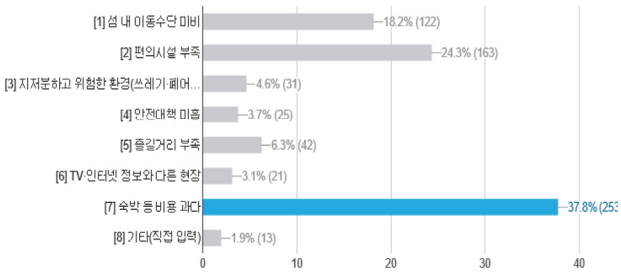


어업활동 기인 쓰레기(부표, 폐어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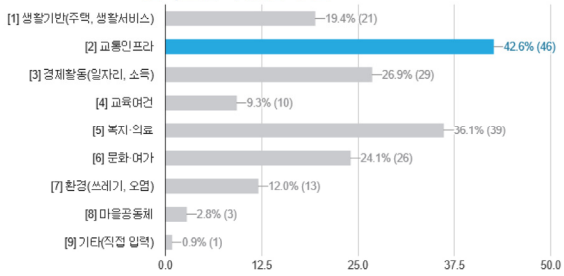


국민의 국토 외곽지역에 대한 인식

가장 불편했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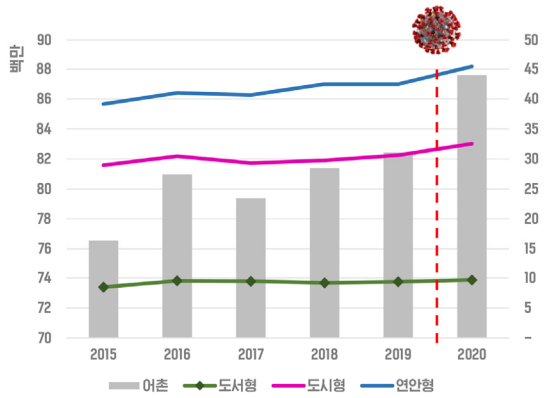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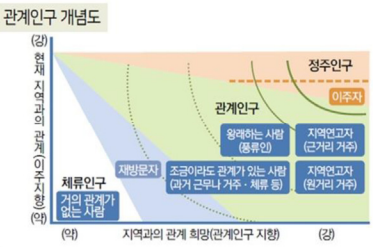
자료 : 대국민 섬 인식조사(2019.6.3~6.4, 응답자 1,023명,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설문조사)

02 국토 외곽지역의 진단과 전망

국토 외곽지역의 유동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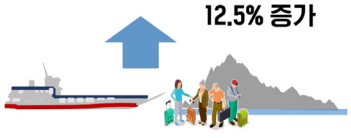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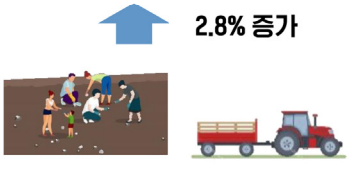
관계인구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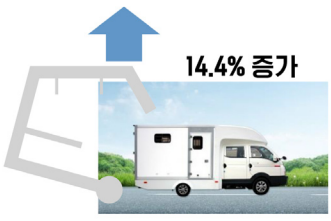


관계인구 만들기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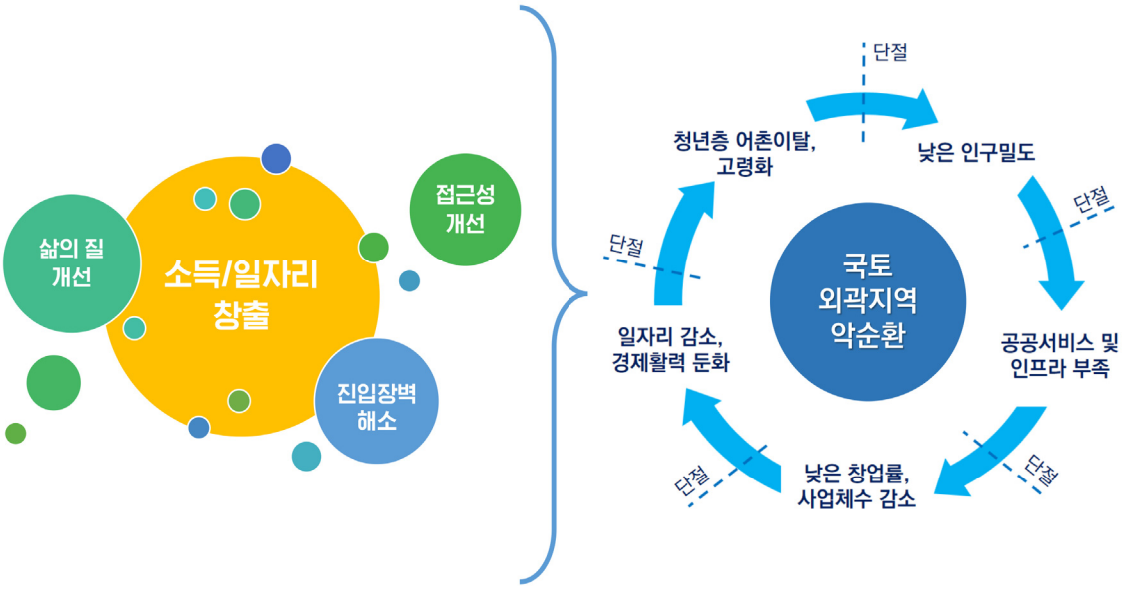






02 국토 외곽지역의 진단과 전망

국토 외곽지역의 악순환 단절 해법 모색 필요



03 해외동향과 시사점

EU OR정책(Outermost Regions)

• EU 본토와 수천 km 떨어져 **여러 조건이 불리**한 **최외곽 지역 수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지원

- **(지원근거)**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유럽해양수산기금(EMFF) REGULATION 등
- **(정책목표)** EU 최외곽 지역 수산업의 조건불리성 완화
- **(사업규모)** '14-'20 EMFF 중 최외곽 지역 보상계획에 의한 추가비용 지원 예산 192,488k€

• 각 **회원국에서 선정**한 **국도 최외곽 지역**에서 특정 **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어업인**에 지원

- 최외곽 지역의 특정 수산물* 생산을 위해 지역적 한계로 인해 어업인·가공업자 등이 부담하는 추가 경비를 보상**
  *'14-'20년 기준 어업 29개, 양식업 21개, 가공업 22개, 유통업 35개 총 107개 수산물 선정
  **'14-'20년 기준 어업 464개, 양식업 273개, 가공업 266개, 유통업 297개 총 1,300의 추가 비용 항목 발생
- 최외곽 지역의 종류와 종사업종, 생산량에 따라 차등 지원

• **최외곽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색경제 잠재력을 활용**한 **실업률 해소** 등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EU의 최외곽 지역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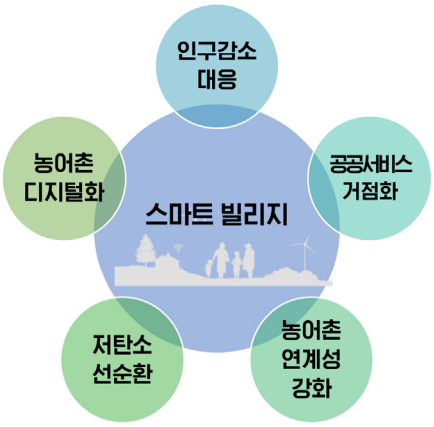


EU 최외곽 지역 지원의 대상항목

구분	지급 금액
어업	유지·관리·보수, 항만 인프라 요금, 보험, 통신(인터넷, 전화 팩스),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비용, 기타 비용, 어선 비용, 기상 악화로 인한 조업 중단
양식	에너지 및 산소, 기상 악화로 인한 양식 중단, 임대료, 운송 및 포장, 보험, 소형 재료 및 예비 부품, 항만 인프라 요금,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비용, 인건비
가공	저장, 설비 교체 및 갱신, 추가 생산비, 해상 운송, 보험, 통신(인터넷, 전화, 팩스),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비용, 기타 서비스, 기타 운영비
유통	얼음, 냉동·냉장 비용, 에너지, 보험, 통신(인터넷, 전화, 팩스), 컨설팅 서비스, 납품 이후 금융비용, 인건비

03 해외동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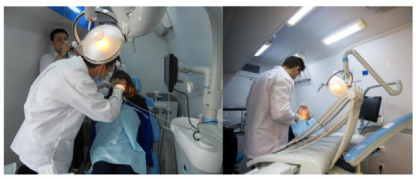
유럽연합 스마트빌리지(Smart Village)



local link
Your Local Bus Service
아일랜드



SAN-CAR
Mobile Dental Healthcare
루마니아
불가리아





SMARTA
smart rural transport areas
독일



03 해외동향과 시사점

일본 이도지역(離島地域) 진흥대책

구분	내용
지정지역	78지역(258개 섬)
관련 지자체	112개 시정촌 (26개 도도현)
면적	5,339㎢ (전국 1.41%)
인구	38만 명 (전국 0.3%)



의료 등 후진성 개선(S 48~)

이도의 국가적 역할 명확화(H5~)

이도의 자립발전 촉진(H15~)

인구소멸 방지 및 정주 촉진(H25~)

정주촉진사업
- 산업활성화
- 정착유인
- 유통효율화
- 이도상품지원 (해상운임 지원)

교류촉진사업
- 이도 홍보
- 교류촉진
- 합숙유치
- 여행상품 개발

안전향상사업
- 방재기능강화
- 관련계획 수립 지원

이도활성화교부금사업(산업활성화, 정주유인 등)
방재대책 강화 지원
이도 세제제도

03 해외동향과 시사점

일본 지방창생 및 ICT 빌리지

정책방향	정책목표	주요 시책내용
사람과 일자리 창생의 선순환	1.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 창출 (청년 일자리수, 여성취업률, 외국인 관광소비액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 인재환원, 지방인재육성 및 고용대책
		ICT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2.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지방이주건수, 지방대학 진학률 등)	지방이주 촉진
		일본형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상의 추진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채용·취업 확대
		지방대학 등 활성화
	3.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자녀교육 지원 (청년취업률, 남성육아 휴업률, 첫째자녀 출산 후 여성취업률 등)	청년층 고용대책 추진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
선순환 지원, 마을 활성화	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소거점화 지역수, 정주자립권 협정체결 등)	소거점(다세대교류, 다기능 집락생활권) 형성 지원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 콤팩트화와 네트워크 형성,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 추진
		대도시권의 안심생활 기반 확보
		기존 스톡(Stock)의 관리 강화











04 신활력 전략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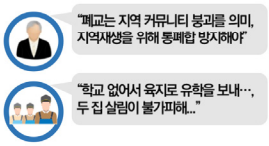
국토 외곽지역의 생활서비스 기준 마련

섬·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소한 마련해야 할 국가의 책무

부문	항목	세부사설 및 측정기준	목표(분, %)
1. 의료복지	1) 진료	시·군·내에서 민간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요 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30분 - 1시간
	2) 응급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0분
	3) 영유아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육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4) 노인	독립적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80%
2.교육·문화	5) 학습	읍·면·내에서 국공립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6) 체육	생활 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7) 초등학교	시역어건에 있는 농어촌 학교를 폭상하고 통학 시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8)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0%
	9) 문화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찾은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3. 정주 여건	10) 생활편의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마을 내
	11)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지붕은 철거 혹은 개량한다.	23%
	12)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5%
	13)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6%
	14)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68%
	15)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농어촌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모든 콘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16)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17) 경찰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1일 1회 이상 탄력 순찰을 실시한다.	100%
	18)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70%
4. 경제 활동	19)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6%







경북 안동 일직중(야구부 창설)



전남 묘량중앙초(차별화된 교육복지)



국토 외곽지역 생활서비스 맞춤형 투자 및 공급 확대 :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체감형 기준 마련

04 신활력 전략과 과제

국토 외곽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확대

기항지 인프라 확충·개선 : 포스트 어촌뉴딜



여객선 운임 : 대중교통 수준으로 대전환



전남 천원 여객선
23.6억 원
(도비 30%, 시군 70%)







대상 지역 → 국토 외곽지역

지원 대상 → 섬주민, 국민

추진 주체 → 해양수산부

04 신활력 전략과 과제

조건불리지역(국토 외곽지역) 공익직불제 확대



현행	개선방향	
친환경수산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	친환경수산직불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
경영이양직불제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	조건불리직불
		영세어업직불

조건불리지역 확대
지원단가 상향(1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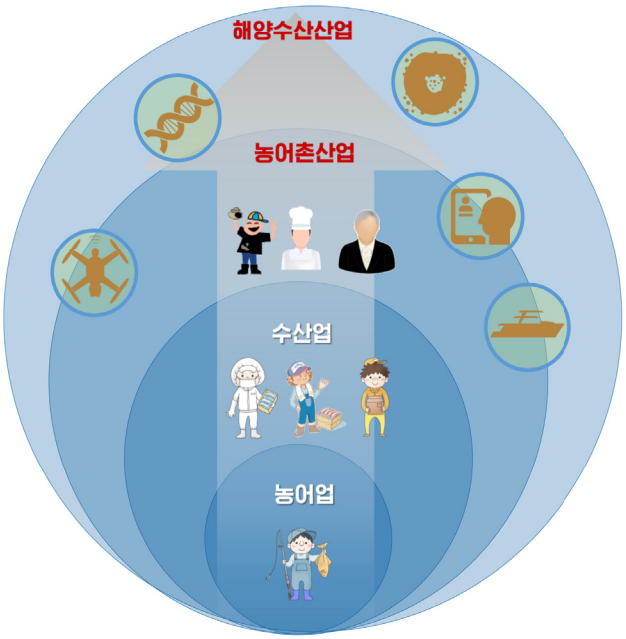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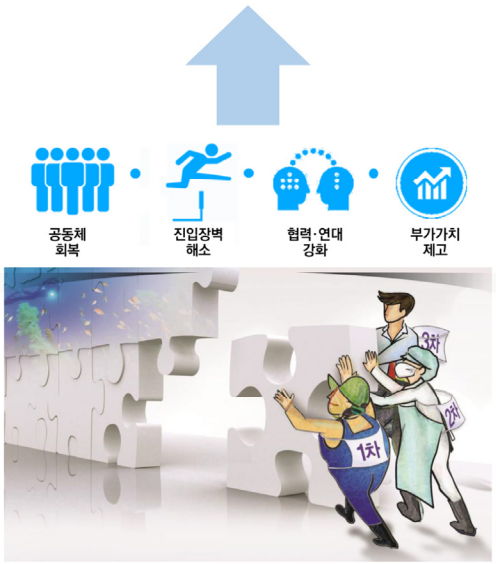
1. 공익형직불제 기본형 역할 제고
2. 정책대상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 최소화
3. 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04 신활력 전략과 과제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



청색경제(Blue Economy)



04 신활력 전략과 과제

국토 외곽지역의 스마트화

일하는 방식

누구에게나 손쉬운 농어업

- 스마트 기기
- 첨단기술
- 기르는 어업
- 잡는 어업

환경공유하는방식

에너지· 경제적 자립마을 조성

-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 친환경에너지 (해상풍력)
- 기본소득 (매전수입)

생활하는 방식

ICTs 기반의 생활환경 개선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 다목적 서비스센터
- 원격 교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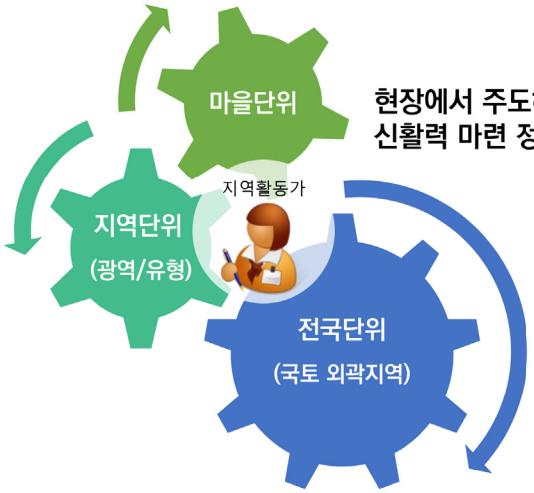




04 신활력 전략과 과제

국토 외곽지역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Outer Region Network : OUTER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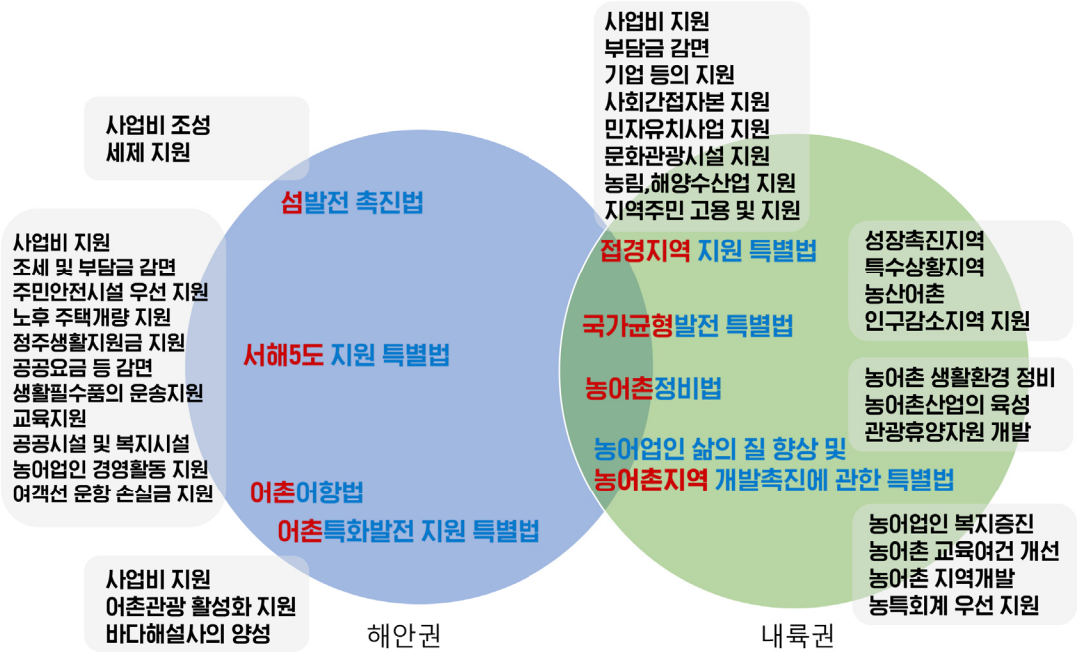
현장에서 주도하는
신활력 마련 정책





04 신활력 전략과 과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04 신활력 전략과 과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접경지역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기업 등의 지원
사회간접자본 지원
민자유치사업 지원
문화관광시설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지역주민 고용 및 지원

사업비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주민안전시설 우선 지원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공공요금 등 감면
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교육지원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농어업인 경영활동 지원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섬 발전 촉진법

사업비 조성
세제 지원

어촌어항법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사업비 지원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바다해설사의 양성

국토 외곽지역 특화된 지원방안

지역 간 지원방안의 균형성

추진체계 재원 (기금)



(가칭)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국토 외곽 3법 개정 추진

04 신활력 전략과 과제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지원 특별법 제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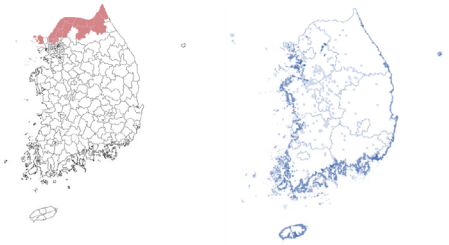
04 신활력 전략과 과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가칭)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추진단

접경지역 섬지역	어촌지역 무인도서 연안여객	해안해상 국립공원	성장촉진지역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05 결론 및 제언



끝이 아닌 시작점 :
해양의 사회·경제적 불리성에 기반한 국토 외곽지역의 인식 전환

국내외 동향 :
치열한 해양영토 경쟁에 따른 국토 외곽지역의 지원 강화

신활력 전략 :
섬, 접경지역, 연안어촌의 특수성과 지역소멸 선제적 대응 지원

정책 제언 :
국토 외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단의 지원대책 방안 강구

국토 외곽지역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연구본부 어촌어항연구실장
박상우 부연구위원
swpark@kmi.re.kr
051-797-4562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정 토론

▮ 좌 장 **신순호** |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1. **김향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2. **윤미숙** | 경상남도 섬어촌발전 자문위원
- 토론 3. **나승진** |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 본부장
- 토론 4. **김희수**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 토론 5. **최현호**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토론 1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연구위원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전략이 갖는 의미

ㅇ 국토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임

- 국토(내륙)의 끝단에 있는 섬·어촌 지역을 국토 외곽지역이라고 명명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작이며, 시의적절한 논의임

※ 국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을 받아오지 못하고 부처의 정책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최근 해양 영토 수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지만 국토 외곽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음

※ 2007년 살고싶은 지역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관광부가 담당한 '가고싶은섬 시범사업'은 4개 지역 대상, 5개년 사업으로 종료.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몰이해로 사업 미추진

- 섬과 관련된 통계의 확보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얻기 어려움)

ㅇ 섬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과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시작이라고 판단됨

- 국토 내륙지역 중심의 정부 공모사업의 추진의 탈피

※ 같은 조건으로는 국토 외곽지역의 자치단체의 공모 선정이 매우 불리(기반 측면, 산업 측면, 인적자원 측면, 예산 측면 등)

- 국토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

※ 어촌뉴딜300사업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어촌, 섬 지역의 삶과 생산기반, 생활SOC,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입
여전히 공공주도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섬 및 어촌지역의 정주 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옴

□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전략에서 강조할 점

○ 국토 외곽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책목표에 전 국민, 전 정부의 공감(共感)와 동심(同心)이 필요함

- 섬 지역의 쇠퇴와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국토영역의 수호 등
- 주민 기본생활권에 대한 확보 및 격차 해소(행복추구권의 차원)
- 기후위기시대, 디지털경제시대에 섬 및 어촌 지역의 수산업 및 농업 등의 변화 모색
-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응
(바다 오염 방지 및 해양생물 보호 등)

○ 정책의 주체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던 것은 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섬 주민이 어떤 애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관한 관심 부족)
- 섬 및 어촌에서 살고 있는 주민,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료·교육·문화·복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부응

○ 실현성을 담보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계획에 대한 공유 등이 필요함

- 계획의 무용론을 이야기하지만, 가야 할 방향성과 국토 내부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
- 범부처, 범자치단체 차원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천력을 담보한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조직 및 인력, 법·제도, 예산 등

□ 실천을 담보한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대응책

○ 접근성 애로 해소: 육지와의 교통, 섬 내의 교통 등

- 미래 먹거리 산업의 대응 - 청년이 섬으로의 이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섬 주민의 주거·의료·교육·문화·복지에 대한 고려
- 섬의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의 발굴: 부처 중심의 공모사업 중심이 아닌 계획협약제도 등을 활용한 섬별 특성화된 사업

□ 섬 지역의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 필요

- 어떤 섬이든 관광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함
  - 섬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주민의 삶을 토대로 한 소극적인 관광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임
  - 일부 섬의 경우는 관광이 주 산업이지만, 모든 섬이 이러한 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해야 함
- 섬 관광 개발을 잘 추진하면 무조건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며, 주민에게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함
  - 관광객의 방문욕구에 대한 변화 고려, 관광객이 무엇에 소비하는지에 대한 고려 필요
  - 섬에서 관광을 주요 산업의 하나로 추진하고자 하면, 섬 지역주민의 정주성 유지, 섬의 고유성 확보, 섬의 지속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섬에 도시와 같은 편리한 관광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함(섬 및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시설들을 조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이러한 시설 및 환경은 섬의 매력성을 떨어뜨림)
- 섬이나 어촌에서의 사업은 무조건 주민들이 다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도 탈피해야 함. 관광사업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할 때에는 외부에서 관련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섬의 인적자본이 확대되는 것임(그러나 외부 자본에 의존한 섬 관광의 추진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섬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섬의 주민, 섬의 환경, 그리고 섬 방문객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섬의 수용력을 기반으로 한 관광정책 설계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

토론 2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문위원 **윤미숙**
경상남도 섬어촌발전

□ '섬 주민 수당제' 도입해야

○ 국토의 변방을 수호하며 근근이 살아온 섬 주민들에 대한 보살핌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책을 좌우하는 정치인들로부터 그동안 '표와 돈'이 안 되는 이유로 오랜 기간 차별과 외면 속에서 묵묵히 국토의 끝자락을 일구고 가꾸며 살아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기 산다. 섬이 무인도와 되는 것은 국가 자원의 손실이라는 측면을 다시금 각성해야 한다. 무인도화 된 섬을 국방, 사회, 수산, 등의 필요에 의해 다시 유인도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든다. 지금 그대로 영위하고 있는 것, 누군가 어렵사리 가꾸며 지켜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각성이 필요한 것이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토 방위 차원의 비용지출이 마땅하다고 본다.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섬 주민 수당제'의 신설이 그것이다. 바다는 날로 저물고, 어선감축, 어자원 고갈, 늙어서 기력부족으로 마땅한 직업과 직장조차 구할 수 없이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변방의 국민들에 대한 국가적 책무라고 본다.

□ 여객선, 도선의 전면적 공영제와 운항 선령을 대폭 줄여야

○ 여객선은 섬 주민들과 여행자들의 이동권, 교통수단이 아닌 여객 사업자의 생계수단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심지어 섬 지역의 소농을 육성 보호해야 할 농협마저 본업은 잊고 여객선 사

업에 뛰어들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객선의 공영제**가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몰제 폐지와 야간 운행이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선박의 야간 운항 기술이 모자라서 운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 묵은 관행으로 잠자고 있는 늙은 해사법을 손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다만 귀찮아서.

- 면단위의 큰 섬에 대한 **여객선 공영제와 야간운항 개설**에 이어, 모섬과 작은 섬을 잇는 **'도선'도 공영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유일한 발이자 이동권이 작은 섬 여객선들은 낡고 누추해서 도무지 21세기 대한민국의 선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행정선만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전혀 알지를 못한다. 작은 섬들에 대한 이동권은 국가가 전적으로 그 운항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 약간의 풍랑에도 운항정지,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고 운항정지, 손님이 없으니까 기름값이라고 아낀다고 운항정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사의 횡포가 비일비재하나 어느 기관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다.

- 선사마다 **낙도항로 보조금**을 받아 챙기지만 섬 주민이나 여행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나 책임감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배는 낡아서 그르릉 거리며 지독한 매연을 뿜고 다니고, 객실에는 청소도구와 쓰레기통과 사람이 한 곳에 뒹군다. 도선의 화장실은 차마 들어갈 수가 없을 지경으로 비위생적이다. **특히, 여객선에 대한 운항 선령 기준을 대폭 줄여서 쾌적하고 안전한 탈거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낙도 도선에 대한 보조 지원예산이 이렇듯 바닷물 속으로 빠져버리고 있지만 해당 시군, 도, 항만청, 해경, 해수부, 행안부, 어느 한 곳 관심을 가지는 기관이 없다.

□ 6차산업 구조를 갖추도록 밀착 지원해야

- 섬에서 생산하는 수산물들은 대부분 중간도매상이 수거한다. 시간이 지나면 팔지 못하는 생물이란 점을 악용하여 갖은 이유를 대면서 헐값에 수매한다. 섬 주민들의 유일한 농사인 미역과 톳, 모자반과 가시리, 섬 쑥 등이 해마다 중간상인들의 농간에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싼 값에 빼앗기다시피 납품이란 것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이 귀한 먹거리의 유통을 보호할 곳은 없다.

  그저 섬 주민들의 팔자려니 하고 강 건너 불구경이다. 면 단위의 큰 섬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정부가 지어야 한다. 수집하고, 가공 포장해서 판매까지 한 꾸러미에 엮어야 한다. 생산자와 협의하고 의논하며 지방정부는 그 품질을 관리 보장해야 한다. 그 중심은 생산자연합이어야

한다. 현행 4단계로 나뉘는 중간상인들의 횡포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하고, 질 좋은 생산품으로 삶의 질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녹색 일자리 창출이며, 어촌뉴딜이며, 결국 해당 지자체의 살 길이기도 하다.

□ 사람답게 살 사회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 **면단위의 큰 섬, 모섬에 병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작은 섬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를 내용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보건지소에 간호조무사가 있어 감기몸살이 심해도 약이나 주사는커녕, 파스나 겨우 나눠주는 것이 현 상황이다. 뱀에게 물려 죽거나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이 걸려 죽어도 아무렇지 않는 곳이 섬이다. 응급헬기는 야간이라 못 오고, 바람이 불어서 못 오는 경우가 많다. 꼭 응급이어야만 병원에 가는가. 섬에 사는 국민도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 **택배비를 지원할 일**이다. 섬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뭍에 보내려면 평균 1만원의 택배비가 든다. 배에서 한번, 뭍에서 또 한 번의 택배비가 드는 것이다. 무게 10키로 미만의 수산물에 대해서 건당, 1천 원 정도의 택배비만 물게 하고 나머지는 선사와 정부가 좋게 합의하라. 섬에 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생필품을 받거나 보내는데 이렇게 비싸서야 되겠는가. 뭍에 사는 자식이 섬에 사는 부모님께 과일 한 박스를 보내려고 해도 택배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섬에 사는 부모님이 생선 몇 마리를 자식에게 보내려고 해도 택배비가 너무 무섭다. 불편도 불편이거니와 이렇듯 소외, 차별되는 국민들이 현존해서는 안 된다.

○ 정부는 **해양과 섬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체계가 없다. 하다못해 높은 산이나 계곡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공원 관리인들을 고용해서 수거하는데 해류를 따라 해변에 침적하는 해양쓰레기는 섬 주민들을 매우 괴롭힌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고, 대부분은 섬 주민들은 쓰레기를 치워서 소각한다.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매우 많으나 분리수거함을 설피 운영하는 지자체는 드물다. 국가는 모르쇠로 방치한다. 지자체마다 해양과 섬 쓰레기 수거 선박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활용품도 함께 수거되어야 한다. 청정한 섬 기슭에서 날마다 소각으로 깊은 화상을 입는 해변이 늘어나고 있다. 한번 그을린 해변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훼손 오염된다.

○ 섬 주민들의 **차량 선박비용을 지원할 것**
섬 주민들의 모든 차량에 대해 일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차등을 두어서라도 지원책

은 절실하다. 생계 수단인 1톤 트럭에 대해서는 1천 원 정도의 선적비를 내도록 해야 한다. 외에 소형 자가용은 절반의 운임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트럭은 주로 생필품을 구하러 오가는 생계형 이동 수단이다.

현재 여객선 운임비로 섬 주민들에 한해 약간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이동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국민들 중에서 거리당 가장 비싼 이동료를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개선되어야 한다.

○ **섬마다 '노요소'를 설립 운영할 것**

노요소는 노인정과 요양원을 합친 뜻이다. 섬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늙고 병들어서 육지의 요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다. 그곳이 생지옥이요 감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중환의 위중한 상태가 되면 인근한 면 소재지 정도의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마을에서 보살피게 하는 **노요소를 지방행정과 함께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섬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지만 이웃과 바다와 한 평생을 살아온 섬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 경로당 건물을 확대 보강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 위로하고 손 잡아주는 재활과 보살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보살핌을 받다가 떠나게 하라. 어촌 뉴딜이 꼭 토목공사여야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불어, 혼자 살아서 영양상태가 지극히 나빠지는 섬 노인들을 위해 점심 한 끼 정도는 노요소에서 함께 하도록 **영양사와 요양보호사, 더불어 건강한 식재료도 지원해 달라.**

○ 농어촌과 섬의 경우, **여성 이장 우대제도**를 도입할 일이다.

생명을 낳고 기르고 돌보는 일은 본디 여성의 일이다. 행정의 최말단 역할에만 치중하는 남성 이장과 달리 여성 이장들은 아침저녁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돌본다. 잠자리를 돌보고 냉장고를 열어본다. 나아가 마을을 이쁘게 가꾸고 부녀회와 합심해서 이것저것 동네일을 잘 꾸려나간다.

많은 출향 자식들이 부모님의 안부와 함께 여성 이장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뜻을 밝힌다. 여성 이장제도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높인다면 여성 이장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장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급여도 좀 올리자. 어촌뉴딜 사업은 사실 어촌과 섬의 복지에만 치중해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국토의 변방, 외곽 지역 중에서도 가장 오지인 섬, 거기에 사람이 산다. 평생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지만 참고 참으며 살아온 선한 국민들이 산다.

토론 3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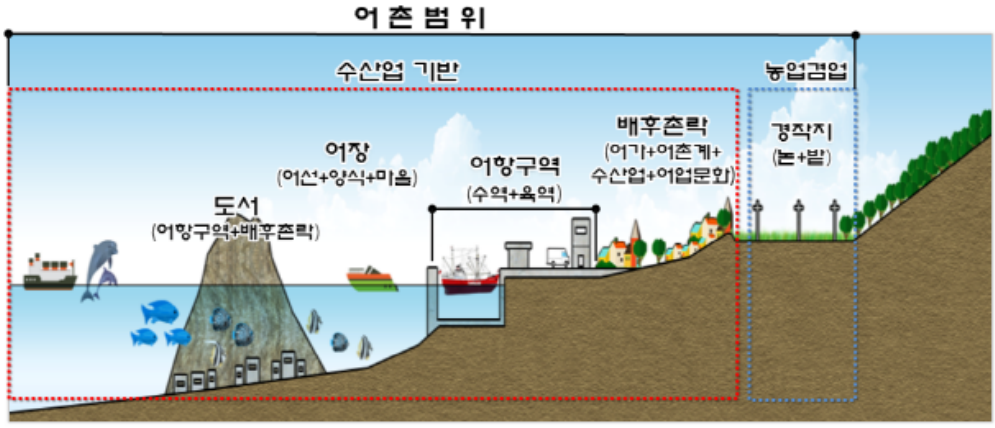
본부장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

□ **(수산업 경제권 형성)** 어촌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지역과 동의 지역으로

* 어촌의 읍·면·동 1,333개 : 해면 560개, 내수면 771개(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 내수면을 제외하고는 **국토 외곽지역에** 어항·연안항, 항포구, 어장, 양식장, 어촌체험마을,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수산업 경제권이 형성**

*** 전국어항 총 2,301개** : **(법정어항) 1,032개** = 국가어항 113개, 지방어항 290개, 어촌정주어항 627개, 마을공동어항 2개 / **(비법정항) 소규모 항·포구 1,269개**



○ 특히, 수산업의 전진기지인 대표어항인 국가어항은 32개(총 113개 중 28%), 어촌체험마을은 중 58개(총 119개중 49%)가 **섬(도서)에 위치**

○ 농촌의 논·밭 등 경작지와 동일한 개념의 **바다 어장은** 연안에서부터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형성된 경제활동공간으로서 규모는 **농토와 비교 불가**

□ **(수산업·어촌의 가치)** 수산정책의 핵심은 '수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의 제고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 (공익기능) 식량안보의 유지, 안전 수산물 공급기반 확보, 어촌사회의 유지와 고용증대, 지역개발, 해양환경 보전, 영토수호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

*(수산직불제법)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다수 연구) 전통문화 보전, 해상재난에 기여, 어촌경관 및 문화의 보전, 국격 제고 등 추가

○ (경제 비중) 수산업 총 매출액은 67조 2,031억 원이며, 이 중 일반 수산업 매출액이 약 52조 원(77.6%), 연관산업이 약 15조 원(22.4%)('16년 기준)

○ (국민 건강) 수산물은 단백질 주공급원으로서,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9kg으로 육류(51.8kg)보다 많음('15년 FAO)

○ (삶의 공간) 우리국민의 80%가 연 1회 이상 바닷가를 방문하고, '17년 기준 낚시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국민 취미활동 1위

- 바다와 어촌은 주민의 생업현장 및 정주공간이면서 국민들의 여가공간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

○ (어촌소멸) 현 추세 지속 시 10~20년 내 어촌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

*지역소멸지수(0.5 미만 시 소멸위험지역) : 섬 0.234, 연안어촌 0.303, 농촌 0.341, 도시 1.208

□ **(낙후어항 재생) 비법정 소규모 항·포구의 어업활동 전진기지 및 국민생명 보호 강화 필요**

○ **배후어촌과 연계하여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의 여객선 접안·편의시설 및 어업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포함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중**

- 그간 소규모 항·포구는 비법정항으로 지자체 자체재정 취약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국고지원 되고 있으나 완료될 경우, 향후 **1,269개** 이르는 비법정 항·포구의 정비·관리 불투명

- 법률상 지자체가 **어항과 배후어촌을 연계한 종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단일사업은 동 사업이 유일**하고, 지역개발 효과 및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생활SOC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중장기계획 필요**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체계 :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제47조의7(2019.8.27. 신설)

- 동 사업으로 정비된 항·포구는 이후 법정어항인 **마을공동어항 등으로 지정 또는 별도 법령에 의한 유지·관리 체계 보완** 등 구상 필요

  * 타부처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에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소교량, 세천,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은 「소규모 공공시설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보강,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체계 운영

□ **(낙후어촌 개발) 수산업경제권 중심의 낙후어촌 지역개발 집중화로 및 정주기반 개선 필요**

○ **'10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관리(농식품부)에 따른 농촌에 비해 수산업경제권이 형성된 **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예산축소, 공공서비스 저하)됨에 따라 **낙후문제 발생**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06년 309억 원 → '09년 181억 원 → '16년 85억 원으로 지속 감소

○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을 해수부로 분리·이관('17년 850억, '21년 450억)** 이후에도, 일부 124개 읍·면(31개 시·군 일부)만 분리되어 그 외 **수산업 경제권역이 형성된 123개 읍·면은 사각지대**

  * (유형별 사업) 권역단위개발(어촌종합개발, 어촌테마마을, 어울림마을), 역량강화
    (기능별 사업)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역량강화

○ **수산업 경제권역이 있는 45개 연안 시·군(247개 읍·면)**의 모든 연안 행정리로 집중화하여 모든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확대 모색 필요**

  * 현재 전국의 연안 읍·면 지역 중 대부분 지역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므로 최소 행정단위인 행정리로 구분하여, 연안은 해수부, 내륙은 농식품부 담당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섬마을 재생) 유인도 무인화 방지를 위한 섬마을 재생을 통해 해양 영토 수호에 기여**

○ 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인한 **유인도의 무인화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접안시설 정비 등), **섬 관광자원**(바다낚시공원, 리조트 등) **개발**

  * 어촌체험마을 체험객 빈도(3개년 평균) : **육지마을 12,952명, 섬마을(연육) 14,883명**

  * (도서개발촉진법)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도서는 개발대상 도서 제외(연륙도서 77개 중 50개 제외, 2019.12.31. 기준)

- 국토의 외연적 확대 측면에서 **도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섬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유인도**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

  * 예시) 세대수가 10세대 미만 또는 정주인구가 30명 미만인 도서를 대상으로 지원 검토

○ 해양영토수호를 위해 지정·고시된 영해기점(23개소) 내 **섬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유인도 등에 **접안시설 등 어항시설 구축**

- 영해기점 내 섬마을 개발을 통해 **섬주민 감소를 방지**하여 해양영토 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주권 확립**

□ **(귀어기반 강화) 창업투자 및 진입규제 등 개선을 통한 자생력 있는 어촌사회 유지 지원**

○ (**창업투자방식 지원**) 천해양식어장의 포화, 양식관련 제도의 패쇄성 등으로 신규유입에 제한적, 어선 및 육상양식은 고가의 자본·기술 등 문제로 정착 애로

- **수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어선어업, 양식, 연관 산업 등)을 구축하여 **귀어인의 수산·양식 창업 등에 필요한 자본조달 다각화 지원 필요**

> * 크라우드 펀딩이란, 군중(crowd) 과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가 웹이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자본시장법 2015.7.2. 개정)
> -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금을 모아 자금을 조달, 신생 벤처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 및 환매 제한 목적
>
> * 최근 들어 크라우드펀딩이 금융, IT분야는 물론이고 영화산업이나 농사 등에도 접목시켜 발전 추세
> - 농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고객 모집을 하고 수확 철이 되면 직접 생산한 작물들을 보내주는 방식도 생겨나는 정도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발빠르게 성장 중

○ (**양식업권 진입 개선**) 해면의 양식업권은 원칙적으로 이전 및 임대차 가 불가, 양식관련 제도의 패쇄성으로 귀어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어촌소멸위기 등이 심각한 지역은 양식업권 이전·임대차 허용을 특례하거나 특별구역 지정(귀농어귀촌법 분법 등) 등을 통해 귀어인에게 양식업권의 이전·임대차를 허용하는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 (**6차 산업화 지원**) 어촌체험마을 119개소 중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의 용도제한으로 체험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 및 숙박 등이 필요하나 식품접객업 등이 불가한 지역 45개소나 존재

- 어촌특화발전지원법령에 따라 어촌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어촌특화마을의 경우에도 해당시설이 필요한 경우 제약 불가피

- 도농교류법, 어촌특화법에 이를 일부 허용하는 특례 신설 검토 필요

  * 참고입법례) 농촌융복합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3) : 농촌 6차산업화 지역에는 일부 허용토록 특례 규정

  * 유사입법례) 도농교류법 개정 하영제의원 대표 발의(2021.8.30.)

토론 4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역균형국장 **김희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농산어촌유토피아 구상의 의의

□ **(의의)** '**농촌공간의 당면한 문제를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해결하여 발전**시킨다'는 **자발적 활동 또는 의지를 담은 구상**

○ **농산어촌과 도시의 문제,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행복 수요**를 **농촌 공간을 통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전략** 제시가 목표

□ **(여건)** 최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성 있는 공간**으로 **농산어촌이 부상**

* 도시 중심 초고속 압축성장, 인구의 도시 집중은 주택·교통 문제 뿐만 아니라 상대적 불평등 심화, 삶의 질 악화, 낮은 행복도, 저출산 등의 문제에 직면

○ 귀농귀촌, 5도2촌 등 **은퇴 후 또는 여가생활**을 **농촌에서 보내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증가('20. 농촌경제연구원)

○ 실제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도 등장

*(함양군 서하초) 전학 가정에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과 지역기업 일자리(에디슨모터스) 알선, 생활SOC 등을 지원, 학생 수 10명→38명으로 증가 및 10가구 이주

□ **(추진경과)** 특별위원회 출범(4.6) 및 분과위원회*(5개)를 구성·운영

○ 분과별 활동계획 마련, 관계부처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외 협력방안 등 논의

◇ **시범사업**을 통해 농산어촌유토피아의 **방향성을 선도 지자체에 접목**하고, 그 **성과를 확인**하여 **대대적인 확산** 추진

2. 주요 추진과제

□ **(시범사업) '어촌뉴딜**(해수부), **주거플랫폼지원**(국토부) **또는 농촌협약**(농식품부)**'을 기본모델*로 관계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추진**

○ **지자체**에서 **'발전계획'을 先수립**하고,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 **(대외협력)** 특위 위원과 **경제·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과의 면담**, **전문가 포럼, 농산어촌 서포터즈 모집** 등 추진

○ 원활한 대외협력을 위해 '고문단', '자문위원'을 위촉·운영

○ '서포터즈', '1사1촌' 등을 통해 농산어촌에 대한 관심도 제고

3. 향후 추진전략

□ **(1단계 : 정책개발) 모델 개발·확립, 제도개선 등 정책과제 발굴**에 집중(~'21)

○ **최대 10개 이내 시범사업**을 실시, **민관 협력***을 통한 **집중 지원**을 실시하여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

* 관계부처 패키지 지원, 기업 사회공헌 활동 및 일자리 연계, 서포터즈 활동 등을 시범사업 지역에 집중 투입

○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포럼** 등을 실시하여 **규제개선, 농촌 활성화 정책지원** 등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2단계 : 공감대형성·확산) 1단계 성과와 정책과제**를 토대로 **민관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대국민 홍보 실시**('22~)

○ **농산어촌 시군 주요 정책에 반영**하고, **경제·사회단체·대학 등과 균형위 간 소통채널 확보, 협력방안 모색** 등 추진

* 각 단체·기관 내 전담팀 신설, 협의회 구성·운영, 협력방안 마련 등

○ **서포터즈** 모집 지역 확대, **1사1촌** 고도화 등을 통한 국민 관심도 제고

토론 5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어촌양식정책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 **바다의 시각에서 본 '국토 외곽지역'의 정책적 의미**

○ 국토 외곽지역(어촌)은 **어업인 등의 생활공간** 및 **어업활동의 근거지**

- 어촌지역 정주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0.5% 수준**에 불과
- **국토(육지)면적의 4.4배**에 달하는 **넓은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수행

○ 바다의 시각에서 '국토 외곽지역'은 국토의 끝이 아닌 '**해양영토의 시작점**'으로 인식 필요

- 인구규모에 따른 균형적 시각이 아니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 필요

□ **'국토 외곽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 국토외곽지역(어촌지역) **신규 인구 유입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 강화 필요

○ 섬, 연안어촌, 도시형 어촌 등 **어촌의 다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어촌 활성화** 추진 필요

* 전체 499개 어촌(읍면동) 중 섬 10.8%(54개), 연안어촌 45.9%(229개), 도시어촌 43.3%(216개)

- (**도시어촌**) 주말·여가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 도시민의 **어업·어촌 투자** 활성화, 부업 형태의 어업 지원 등 **도시민과의 융화**에 중점

- (**연안어촌**) 고령화, 경영난 등에 대응하여 젊은 귀어인 유치를 위한 **일자리 정책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촌인 유치에 중점
- (**섬어촌**) **해양주권 수호**라는 공익적 개념에서 거주민 유지·확대를 위한 공익형직불제(조건불리지역) 등 **거주인센티브 확대**에 중점

□ **'국토외곽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 어촌뉴딜 300 사업 : 낙후된 어촌·어항 현대화 및 해양레저 활성화 〉

○ (**어촌뉴딜**) **여객선 기항지의 선착장 정비 등 접안시설 개선**과 **소규모 해양레저 계류시설 조성** 등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지역과 연계

- 기항지와 같은 **취약지역 어항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 집중 투자**를 통한 열악한 접근성 개선

* 접안시설(선착장, 소형선 부두 등), 편의시설(대합실, 화장실 등) 확충·개선

〈 기항지 접근성 개선 사례(만재도) 〉

만재도 접안시설 정비 전	만재도 접안시설 정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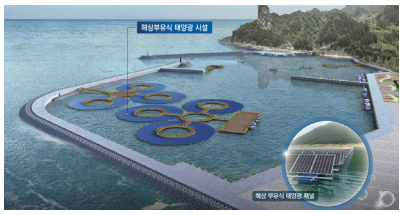
〈 포스트 어촌뉴딜 300 : 어촌지역 복지·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 (**포스트 어촌뉴딜**) 한국판 뉴딜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 국토 외곽지역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한 구체화

-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국토 외곽지역 현장의 일터(생산성 향상, 안전관리), 삶터(생활편의)를 변화·혁신시켜 현안문제 해결
- (**생산성 향상**) ICT 기술을 적용하여 국토 외곽지역의 생산성 제고, 새로운 판매방식, 판로확대 등 소득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지원
- (**생활편의**) 1인 가구(초고령층) 증가에 따른 노인성질환 건강관리 지원, 부족한 의료 인프라 극복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 (**안전강화**) 첨단형·지능형 CCTV, 드론 등 **사각지대 환경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서비스 강화

- (**에너지 자립**) 국토 외곽지역 입지·환경적 특성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 및 탄소배출 저감** 등 **어촌형 탄소중립 모델** 구축

〈 탄소중립형 어촌마을 모델(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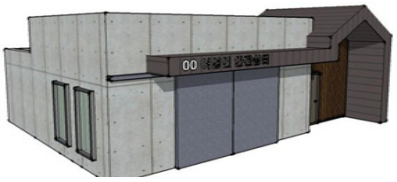
그린뉴딜 거점형	유휴어항 활용형	어가(개별주택) 활용형
		

○ (**맞춤형 생활서비스**) 국토 외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어촌형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 및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섬, 접경지역, 연안어촌 등 입지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형 생활서비스 **실태조사**와 **국토 외곽형 생활서비스 체계** 마련
- 국토 외곽지역 어촌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형 생활SOC 확충**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 연안항, 국가어항 등 거점형 센터와 소규모 마을단위를 유기적으로 연계('22년 이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어촌형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방안(예시) 〉

지역거점형 (수익형 선순환 구조)	마을단위형 (비수익형)	조건불리형(섬) (비수익형)
		

〈 주거·교통 여건 개선 〉

○ (**주택지원**) 어촌지역 **신규 진입자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제공**을 위한 **진입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계획(귀어인의 집) → 초기정착(주택 리모델링) → 장기정착(주거플랫폼)

○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 **연안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

- 낙후된 **여객선·어선 접안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여객선 미운항 섬 지역 대상 **지자체 항로운영 지원** 등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